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35)

국제우편이 밀수의 온상이 된 이야기

1952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에 다녀온 우정국장 최재호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등 주요지 우체국을 돌아다니며 보고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서 그는 UPU 총회의 모습, 각국의 체신제도,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대우 등을 설명하고, 우리 체신인이 일치단결하여 체신사업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재미있는 우정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순회강연이 끝나자 그는 '우편강조기간'을 설정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설정한 '우편강조기간'이었다. 지하 일로에 있는 체신종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 체신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뜻에서였다.

우편 이용자들로부터 기탄없는 비판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우정사업 개선에 대한 건의나 요망사항, 종사원의 비위 또는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도 아울러 받기로 했다. 우정국장에게 직접 보내도록 신문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렸다. 일부 간부들은 체신부를 헐뜯는, 비건설적이고 비생산적인 내용만 들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모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참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수십 통의 건의와 신고가 들어왔다. 피난지 임시 사무소에서 우편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우편물이 잘 배달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에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더욱 향상을 기한다 하니 고맙다는 내용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지연되고 오송(誤送)이 많으니 시정해 달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국제우편물 사고와 검열로 인한 배달의 지연이었다.

“교육학에 관한 참고서가 없어 일본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송금할 방법이 없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우편물 속에 넣어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주문한 서적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월여가 되어도 무소식이기에 서신 연락을 해보니, 전연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미화를 봉입한 일이 위법이면 압수는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통지해야 할 것이고, 또 편지는 보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감행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귀하께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시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신고 건의하라고 하기에,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견지에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범법 악덕한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합니다.”

어느 국민학교 여교사가 보낸 신고의 내용이였다.

감리국 검열과 직원이 밀수의 주범이었다

UPU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최재호는 도쿄에서 소포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바 있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포우편을 통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같은 비리는 당연히 우편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체신부 우정국에서 시정해야 할 일이였다.

소포우편을 통한 밀수는 소포우편물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부산우체국을 통해 통관되었다. 부산우체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은 부산우체국 국제우편과 직원과 감리국 검열과 직원이 합동으로 검색했다. 검열과 직원이 검색에 참여한 것은 우편물을 통한 간첩행위를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국제우편과 직원이 우편행낭을 열어 소정의 절차를 밟은 뒤에 검열실로 가져가야 함에도 검열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편행낭째 빼앗아 갔다. 어떤 때는 국제우편과 직원이 우편행낭을 열자마자 검열과 직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우편물을 한 아름씩 안고 2층 검열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고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핑퐁을 쳤다. 검열과 쪽에서는 국제우편과 직원들이 상인과 결탁해 밀수를 하기에 개냥하기 전에 우편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제우편과 직원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상습적으로 밀수를 하는 검열과 직원들이 검열한다는 핑계로 우편물을 우편행낭째 가져가 밀수품을 빼돌리고 나머지 우편물만 돌려준다고 했다.

양자의 관계를 은밀히 내사하고 난 최재호는 불시에 부산우체국으로 쳐들어갔다. 그 날 일본에서 도착한 우편행낭을 골라 열도록 했다. 국제우편과 직원들은 검열과의 지시나 입회 없으면 개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주저했다. 최재호는 자신이 책임 지겠다고 개냥을 명령했다.

우편행낭을 열자 똑같이 생긴 소형포장물과 3중우편물이 쏟아져 나왔다. 주소를 살펴보니 수취인이 ‘검열과 귀하’ 또는 ‘검열과 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소형포장물 속에는 일제 양단이 들어 있었고, 3중우편물은 ‘문예춘추(文藝春秋)’나 ‘중앙공론(中央公論)’ 같은 일본 잡지였다. 최재호는 그들 소형포장물과 3중우편물을 별개의 행낭에 담아 별실에 보관시키고 귀가했다. 드디어 검열과에 대해 대수술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이튿날 감리국장 김의창에게 사건의 대략을 설명하고 현물을 보여 주었다. 김의창은 깜짝 놀라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검열과 직원들의 밀수행위는 그렇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우편물을 자유롭게 검열할 수 있는 자리를 이용해 수시로 밀수를 했다. 우편물에 달리를 넣어 보내면

일본인 친지나 상인이 양단이나 잡지를 사서 보냈으며, 밀수품이 도착하면 검열한다는 구실로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 그들이 직접 밀수를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상인들의 부탁을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다. 일반인에게 부쳐져 오는 일본 잡지는 불온서적이라 하여 압수하면서 밀수한 잡지는 시중에 유통시켰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우편 사고를 근절하도록 지시하다

우정국장을 두 번이나 지내다 경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재호가 다시 우정국장으로 되돌아온 것은 1954년 7월이었다. 그 동안에도 국제우편에 얽힌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이승만이 국제우편에 얽힌 비리를 근절하라고 지시를 내릴 지경이었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최재호는 우정국장으로 되돌아온 즉시 국제우편업무의 개혁에 착수했다. 먼저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분 분석을 했다. 서울중앙우체국 국제우편과 직원 대부분이 정실 인사로 배치되어 있었다. 과장으로부터 말단인 서기는 물론 임시직에 이르기까지 체신부 간부 아니면 국회의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그들의 친척이거나 그들이 추천한 자였다. 국제우편과라는 자리가 그만큼 수지맞는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최재호는 서울중앙우체국 국제우편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했다. 국제우편 사고에 대한 사회의 비난 여론이 얼마나 심한지를 생생히 알리며,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앞으로 취할 방침과 태도를 천명했다. 비리에 얽힌 사람은 인사이동 내지 파면으로 가차 없이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은 공포로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비행이 드러난 자는 무조건 인사이동을 시켰고, 그가 취임한 이후에 비행을 저지른 자는 가차 없이 파면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대부분 임시직이었는데, 그 숫자가 20여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든든한 배경을 믿고 설마 하는 눈치였으나, 결과를 보면서 몹시 당황해 했다.

제도 개선도 아울러 추진했다. 사고의 온상이 된 소형포장물의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UPU 국제사무국과 각 회원국에 알렸다. 소형포장물은 상인들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데다 주로 보따리장수들이 이용하고 있어 그 취급을 중단해도 큰 피해는 없었다.

국제우편 사고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다

그처럼 철저히 단속함에도 사고는 일어났다. 그가 우정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두 건의 사고가 터졌다. 한 건은 부산에서, 또 한 건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체신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앞에서 소개한 사건의 복사판이었다. 그곳 상인이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인과 공모하여 일제 양단을 소포우편물 내지 통상우편물로 보내면, 부산우체국에서는 정식 수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수취인에게 넘겨주었다. 환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된 범죄가 그때야 비로소 꼬리를 밟혔던 것이다.

우정국장 최재호는 총무과장 김정진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현품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취조했다. 그 사건에도 체신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성 모는 체신부 사무관 출신으로 부산체신청 간부들과 빈번히 접촉한 자였다. 사건에 연루된 부산우체국 국제우편과 직원 중에는 체신부 간부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많았다. 사건 관련자는 과장 이하 전원 파면되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부산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 도쿄에서 일제 양단을 소형포장물로 꾸러 한국으로 발송하면 서울중앙우체국 운전수가 이를 빼돌려 상인에게 넘겨주었다. 소형포장물은 그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던 것인데, 도쿄 중앙우편국 직원을 매수해서인지 이를 별개 행낭에 넣어 발송했다. 그리고 서울의 동업자에게 몇 월 며칠 행낭 몇 개가 항공편으로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서울의 상인은 서울중앙우체국 운전사와 발착계 직원을 매수하여 비행장에서 운반해 온 항공우편물 중 소형포장물이 들어 있는 행낭을 골라 자동차로 빼돌렸다. 개냥도 하지 않은 행낭을 가져가므로 다른 직원들은 국제우편과 업무와는 상관없는 줄 알고 묵인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 이 사건에도 체신부의 현직 간부가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그것도 국제우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우편 과장과 그 밑의 두 계장이 관련되었기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소형우편물의 취급이 중지됨을 계기로,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하겠다는 모의를 눈치챘음에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국제우편과장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그처럼 엄벌주의로 일관하자, 국제우편 사고는 대폭 줄어들었다.